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투자 증대 방안

이 재 윤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과거 역대정권은 지난 10년간 집요하게 대학 기여금 입학제를 시행하려 하였고, 교육법 제 71조 ②항을 개정하여 대학입학 업무를 대학에 맡긴다는 자율권이라는 포장 속에 바로 기여금 입학제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율권 자체는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기여금 입학제는 이 자율권 속에 절대로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이것이 포함될 수 없도록 단단히 제외시켜야 하겠습니까. 기여금 입학제를 절대 반대하는 이유와 교육투자의 획기적 증대 방안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993년에는 여러 대학의 입시 부정을 위시하여 헤아릴 수 없는 사학의 부정입학의 조직적 행태가 만천하에 날날이 드러남에 따라 온 국민은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 교육청소년분과 위원회에서 밝혀진 바로는 지난 '88년 이후 '91년까지 전국에서 49개 대학교가 부정입학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이 나라 대학교육의 도덕성이 절망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구조적 먹이 사슬이 관행화되어 대학의 책임 있는 자리의 총장 및 교무위원, 직원, 학생은 물론 수험생, 학부모, 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사 및 일반인 브로커 등이 연계되어 조직적으로 입시 범죄를 저질렀고, 이 같은 범죄행위로 사학제

단은 막대한 자금을 조성하였고 관련자들도 개인적인 치부를 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모든 범죄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정신의 부패에 있으며 그 동안 도덕과 창조에 기초한 교육혁신의 부단한 정책 결단을 게을리해 온 정부와 대학, 그리고 교육계에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학의 재정난이 가장 주된 원인인 것처럼 인식하는 사고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틀린 발상은 대학의 재정난을 기여입학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학문은 교육기회 균등과 도덕성에 기초하여 정진하는 선비정신으로 해나가는 것이며 돈은 그 다음에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대학입학 기회는 본인의 자질과 노력의 과정을 거친 결과를 평가하여 주어져야지 돈으로 사는 대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제도가 완전무결하게 운영된다 해도 다음에 염려되는 폐단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첫째, 이 제도는 우리 나라의 헌법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 하는 것은 본인의 지적, 신체적, 인격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그 이외

의 제 3의 재력이나 권력 혹은 가정의 사회적 신분을 지칭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권리라 함은 생존권적 자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여입학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품운영기구를 운영하는 요체인 금전적 가격원리를 본인의 능력만이 요체인 교육시장기구에 억지로 대입시키려는 몰가치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여입학제가 허용된다면 무슨 행동을 해서라도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정부 및 사회각계 요직에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그 자녀들의 입학허가를 요청할 때, 사립대학은 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과 같이 교육기회의 균등과 도덕성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 하에서도 학부모들이 신경과민증에 가까운 염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 돈으로 자녀들을 입시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부모가 무슨 행동을 해서라도 기여금 마련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없게 될 때에는 부모로서의 열등감, 자기비하를 하게 될 터이니 이 자체가 가정교육을 해치는 반 교육적인 것입니다. 또한 자칫하면 부모와 자식간에 반목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넷째, 십대 청소년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외형적 성장정책 아래 개발 이익의 일그러진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부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게 상존하고 있으며 온갖 투기와 병폐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입시 투기까지 정부가 주도 조장한다면 모험심이 강하고 예민한 십대 청소년들이 만약 자기들 가슴에 상처를 준 이 기여금 마련을 위하여 돈을 사냥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같은 상황은 생각만 해도 대단히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이에 관련된 사회비용 부담은 막대할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교수는 각 학과별로 입학생 사정절차에 불가피하게 가담되어 기여금 입학의 몰가치와 부조리를 추인하게 될 것이니, 따라서 전인격적 교육을 담당하는 스승의 강단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대학의 일부 교수나 직원 혹은 동창회원 일부가 기여금 입학제를 소개하는 중개인이 될 것입니다. 흔히 기여금 입학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경우와 일본의 예를 들지만 이것은 전혀 부당한 비교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학은 너무 많고 입학생은 너무 모자라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매년 80만명이 대학입시를 보고 그중 약 40만명만 4년제 대학이나 혹은 2년제 전문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고, 나머지 40만명은 낙방하고, 그중 30만명 정도는 거리의 재수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일본은 몇몇 의과대학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기여금 입학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것도 폐단이 많아 요즘은 정부와 의과대학이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째,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입학이 사회적 신분상승의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본인의 지적, 신체적, 인격적 능력과 관계없는 부모의 돈이나 권력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한다면 사회적 신분 세습을 제도화하는 결과가 되어 봉건시대의 신분세습제를 방불케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이 폐단이 많은 기여금 입학제 즉, 돈입학제라는 신종 입시투기를 절대 반대하고, 가장 교육적이며 헌법 31조 정신에 부합하는 교육투자의 획기적 증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교육시설 투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10% 면제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부 보조금을 현재 사립대학 재정규모의 단 3% 수준에서 20%로 늘리면 연간 1조원의 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 및 국공립대학 재정도 현재 약 20조원보다 매년 20%씩 늘려 가면 4조원의 증대 효과가 생깁니다. 총 5조원씩 매년 추가로 투자하면

2003년에 가서 공교육투자가 총 40조원 즉 GNP의 약 5.7%가 되어 비로소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6%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인 지금도 GNP 대비 4.3%정도에 머물고 있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GNP 대비 6%대에 달하는 교육투자를 꼭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은 현행 교육세를 제대로 쓸 것은 물론 모자라는 것은 부동산 및 재산세에 확대 적용하면 조세 저항도 없어 국민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위시한 재산세에 교육세를 부과하며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의 총가치 약 2,600조원의 65%를 상위 5%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5%의 부유층에게 누진세율로 부담하면 넉넉한 교육세 재원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개발 통합체제 운영에 의하여 산업계 연구개발비의 20%를 대학이 담당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연간 1조원의 연구비가 추가로 대학에 조달될 것입니다.

넷째, 대학이 현재는 오후 6시만 되면 막대한 시설이 휴면 상태가 되고 겨울과 여름방학 동안은 완전 휴면상태가 되는데 만약 대학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전일 주야간을 통틀어 운영하면 현재 정원보다 약 50% 이상 증원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등록금 수입증가분이 신규 교수 채용 및 추가예산 지출 후에도 약 1조 5천억원의 순증액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거리의 계수생을 줄일 수 있는 교육기회 확대도 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계개혁을 통하여 조건 없는 순수한 기부금이 대학으로 들어올 때 혜택을 지금보다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째, 사학재단은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와 공시제도 활용으로 투명한 재정운영을 함으로써 대학 내 구성원들

의 신뢰는 물론 외부자들에게도 신뢰 관계를 두텁게 하여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위의 여섯 가지 방안을 정성껏 추진한다면 현재 사립 및 국공립대학 총 재정규모 5조원이 약 12조 5천억원으로 증대될 것이며 순수한 증대 금액만도 7조 5천억원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21세기는 도덕률과 창조력이 통합된 가치관인 생명생활(生命生活)에 기초하여 신문명이 꽃피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각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도덕률과 창조력의 평생교육을 해나갈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도 철저히 정의롭고, 교육적이어야 되겠습니다. 기여금 입학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의 궁여지책론에 입각한 사립대학 교육투자 증대 방안은 21세기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정의로운 틀을 부패 구조화 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온 국민은 철저히 이를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한**

이재윤

서울대 법과대학 행정학과(법학사)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Hartford 경영학(MBA)과 경제학(MA) 석사를 받은 후 중앙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를 수여받았다. 미국 Hartford National Bank & Trust Co., 재무조사분석부 차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기술경영연구소장 겸 기획관리실장,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및 경제정의 실천연합 중앙상임집행위원 겸 중소기업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에 있다. 주요저서 및 연구보고서로는 「기술관리 및 연구개발 체제」, 「연구개발팀의 성과에 관한 국제비교」, 「벤처캐피탈 투자결정요인」, 「군 R&D와 민간 R&D의 유기적 협력체제」, 「한국사립대학교재정방안」 등이 있다.